

총리간담회, “중소기업 경영애로 봇물”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다양화 등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가 봇물을 이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5월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한승수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경제가 잘되려면 중소기업이 잘돼야 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청와대 내에 중소기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추진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므로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단가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고 대기업이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며 관련 법률에 원부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2000년에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변화된 경제환경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 공공구매제도가 경쟁위주로 설계돼 있어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이 사실상 가격 이외에 경쟁요소가 없는 업종과 맞지가 않는다며 중소기업제품의 특성에 맞게 공공구매방식을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기 부산울산지역회장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비수도권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6.2km²를 우선 해제해 중소기업 산업용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주간 80여개 행사 전국서 개최

제 2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시작으로 한복패션쇼,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상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과 공동으로 '경제강국, 중소기업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80여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중소기업주간에는 한국경제 희망인 중소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계 현안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와 함께 문화경영 트렌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주간행사는 13일 중앙회 국제회의장(2층)에서 개최된 '전국중소기업인대회'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치사를 했으며,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중소기업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희망한국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4일에는 한국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복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한류산업으로서 한복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한복패션쇼'가 열렸다. 특히, 패션쇼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기획됐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상포럼'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15일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세미나', 사회적 책임과 문화경영 확산에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인 음악회'가 열렸다. 이외에도 '태안 유류오염 사고지역 자원 봉사활동',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축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소기업주간행사는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최대 행사로 중소기업인들의 큰 잔치이다.

산재·고용보험 체납시 대출 힘들어진다

앞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체납한 기업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연체정보가 최근 은행연합회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체납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해당정보가 은행연합회로 보고된다. 은행연합회는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연체내용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용정보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집중해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업자가 받는 신용정보는 다시 금융회사에 제공돼 해당 개인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줄인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무역원활화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금년 상반기 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하여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여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 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한다. 또한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 시 8개월로 제한되어 회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장치를 허용하고,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함으로써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107개 → 49개'로 통합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예전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사업이 49개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5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 사업간 중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통합, 단순화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연구개발사업을 ▲산업원천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특정목적 지원사업 ▲출연연구 지원사업 ▲기능별 지원사업 등 5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107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49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위한 워크아웃 '활성화'

최근 원자재값 상승, 고유가 등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기업경영 여건의 악화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활성화 및 채권은행 협약에 의한 공동자원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대출의 신용등급별 신규 취급현황 및 차주의 재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가칭)'를 운영해 애로사항 개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중기 지원 예금상품 출시

기업은행은 지난 5월 13일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중소기업 대출 자원 마련을 위한 특별 예금상품인 '중소기업 희망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 구성은 적립식 및 거치식으로 구성됐으며 적립식(계약기간 1년~3년 이내)은 월 적립금 1만원 이상, 거치식(계약기간 1년 이내)은 계약금액 1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상품에 가입하면 '기업사랑 동침' 우대금리 0.1%포인트를 포함해 최고 연 5.48%의 금리를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하면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해 절세형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중소기업청은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 업종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 업종에 재배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4을 사업주에게 1년간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업종전환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그 하위 범주인 세세분류간 전환에서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타식품제조업(소분류) 내 설당제조업(세세분류)에서 커피가공업(세세분류)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으로 과제당 1억원까지, 컨설팅비용으로 업체당 24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30억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중기청장, 살맛나는 '중소기업 희망전략' 제시

지난 5월 15일 중기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사고로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인 '중소기업 희망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가능성이 큰 선도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글로벌 스타기업을 만들고 다른 기업에게 발전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희망 전략'은 중소기업 규제를 기업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열세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체급별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걸맞는 정책발굴, 추진을 위해 중기청은 각 지역별 기업인 중심의 옴부즈만을 구성하는 한편 상시적인 중소기업 정책점검을 위해 신설사업은 3~5년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도입, 중소기업에게 걸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인 'SPI-1357'과 지역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중심인 지방중기청 기능을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로 개편해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를 3조원으로 확대(12

년)하는 한편 국제 공동 R&D, 산학연 R&D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연내 100여개 기업을 선정해 R&D, 금융·세제 등 지원을 집중하고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기술사관학교'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유지' 희망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문화접대비제도를 지속 및 보완할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에정으로,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공연·도서 등 문화접대 관련 지출이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매출액 3천억원인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천만원일 경우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00만원 중 접대비한도액(1억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을 추가로 손비(비용)로 인정받아 총 1억6500만원을 접대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금은 412만500원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의 문화로 모시기(문화접대)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56.9%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문화접대비제도의 지속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경영활동에 문화를 접목하는 문화경영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필요' 8.6%, '필요' 68.1%로 전체 응답 기업의 76.7%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경영 아카데미과정 등이 개설될 경우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 기업의 62.5%가 '의향이 있다'고 답해 문화경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 88.3%는 거래관계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를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접대형태는 술접대(74.4%), 골프(40.6%), 공연 등 문화접대(33.1%) 등의 순(복수응답)이었다.